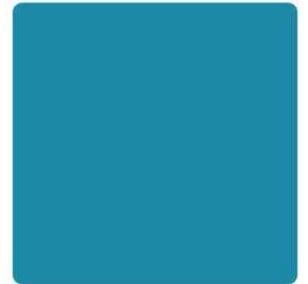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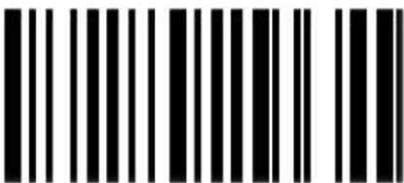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를 집중 분석한
새사연의 It Book [잇;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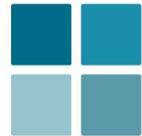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2013년 7월



2013023224692



새사연의 진보적 정책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적 공유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새사연 회원으로 참여하여
진보의 정책 자산을 늘리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도록 합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새사연이 도약합니다.



[잇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Part 1.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발행 | 2013년 7월 19일

지은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펴낸이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20길 37 302호

전화 | (02) 322-4692

팩스 | (02) 322-4693

홈페이지 | <http://saesayon.org>

전자우편 | edu@saesayon.org



여는 글

신자유주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쓴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지 15년 남짓 지났습니다. 우리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시켜왔는지를 한 해, 한 해 지켜봐왔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용기보다는 좌절을 먼저 느낀 것이 그간 한국 사회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사연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의 흐름에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기에 새사연은 2012년부터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잇북 :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는 2013년 상반기 신자유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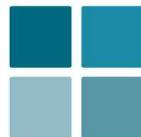
백 마디 주장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숫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실제보다 낮다고 합니다. 본 책에 수록되어있는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 불평등” 에서 역시 미국인들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불평등, 양극화가 익숙해져버린 탓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다 현실에 밀착한 연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책에 수록되어있는 총 7편은 개별적인 보고서이지만 소득, 자산, 노동에서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라는 보고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 반민주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지를 지적한 보고서입니다.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은 재산, 즉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ILO가 제시한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에서는 우리는 소득불평등이 가져오는 여타 문제점과 이것이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을 가하며 사회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간을 들썩인 조세피난처 문제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며 금융화의 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정책 필요” 와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에서는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의 필요성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변



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새사연의 [잇북]을 읽으면서 다가 올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시민들과 함께, 시민주도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 차

여는 글	3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6
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11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	
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16
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25
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33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ILO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37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AEGEE EUROPE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41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Robert Reich	



신자유주의 반대말은 민주주의

Watch Out, George Osborne, 장하준

2013.05.27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정 없애고자 하는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 자체라는 사실이다. 경제정책이 정치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실제 민주주의의 거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긴축을 둘러싼 충돌은 예산, 실업, 성장률에 관한 수치에 관한 것뿐이 아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충돌이다.



▶ 역자의 글 ◀

지난 4월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3%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p 삭감하였다. 특히 영국의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1월보다 0.3%p 하락한 0.7%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며, 이례적으로 영국의 긴축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블랑샤는 경제 전망을 묻는 SKY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긴축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영국의 경제정책을 “불장난(playing with fire)”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영국 가디언(Guardian)에 실린, 민주주의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두 개의 칼럼을 소개한다. 하나는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칼럼으로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한 90세 노병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그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복지와 민주주의 가치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우 훌륭한 칼럼이다. 칼럼의 핵심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는 서구 세계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운동의 자유, 정당한 법의 절차,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 비용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종신형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지 못한 대가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계급(two-tier) 사회로의 회귀임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부의 비축량이 지구상의 모든 강물을 한데 합한 것만큼 방대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정치인과 금융 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인권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건강보험, 연금, 적정 임금,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치를 누리고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돈이 부족하거나 빚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공동체보다는 장부에 충실한 시티의 은행가나 헤지펀드 관리자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은 민중이라는 것을 정부가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심하라, 오스본 총리

(Watch Out, George Osborne: Smith, Marx, and even the IMF are afte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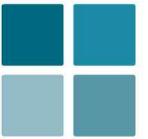
2013년 5월 8일
가디언(the Guardian)
장하준

한편 장하준은 최근 영국의 긴축정책에 대한 IMF의 비판을 상기하며, “IMF로부터 긴축정책을 완화하라는 충고를 듣는 것은, 스페인 종교 재판관에게서 이단자에게 더욱 관용을 베푸라는 조언을 듣는 것” 과 동일하다고 비판한다. 그만큼 IMF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긴축정책의 교리를 설파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잘못된 처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발전이다. 과거 30년 동안 IMF는 긴축정책을 전파하는 기수(standard-bearer)였다.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IMF는 당시 재정흑자를 유지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에까지 정부지출을 삭감하라고 강요하였다. 그때는 그 나라의 역사에서 이미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5개월 동안 하루에 100개가 넘는 기업이 파산하던 시기였다. 재정정책이 황당하게도 긴축으로 전환하자,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졌다.

사실 IMF는 감사기관인 IEO(Independent Evaluation Office)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97년 IMF의 감독 및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IMF의 경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터무니없는 경제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IMF는 1997년에 한국경제의 1998년 성장률이 2.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199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6.7%였다. 9%p에 달하는 성장률 전망의 오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무능력의 결정판이었다.

그러면, 하물며 긴축의 신봉자인 IMF도 영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라고 충고하는데, 왜 영국 보수당 정부는 작동하지도 않는 기존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그는 바로 “정부는 사실, 가난한 사람에 맞서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 이라는 국부론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즉 영국과 유럽의 현 경제정책은 부자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가난한 사람이 대신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와 복지를 통한 정부 지원을 상실했지만, 위기를 초래한 월스트리트와 시티는 아무 것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우 이질적인 두 경제학자를 인용한다.



혹시라도 당신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위에서 인용한 문구는 칼 마르크스가 쓴 것이 아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어설피게 쓰지는 않았다. 그는 예의 그렇듯 위풍당당한 어조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의 공동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하다. 위에 인용한 정부에 대한 경멸적인 문구는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홍보 대사로 알려진, 아담스미스가 쓴 것이다.

정부는 부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서술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그리고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서술은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에 나온다. 자신의 논거를 위해 양극단에 위치한 두 고전 경제학자의 진술을 인용한 그의 기지가 새삼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 거의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게 된 데는 바로 당시 정치 제도, 특히 참정권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스미스와 마르크스에게, 국가의 제급적 편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부자만이 투표를 하던 시대에 살았다. 따라서 부자들이 정부 정책을 지시하는데 거의 견제가 없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성인에게 돌아간 지속적인 참정권 확대에 따라, 국가의 제급적 성격은 상당히 희석되었다. 복지국가, 독점 규제, 소비자 보호, 노동권 보호 등은 바로 정치적 변화 때문에 구축된 것들이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소수 특권만을 위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다. 부자의 편에 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보통선거를 강렬히 반대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생산수단을 전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정치인을 선출할 것이기 때문에, 부를 만들 인센티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단 보통선거가 도입된 이후, 그들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정치인은 재선의 기회를 극대화하지만, 경제를 망가뜨리는 - 돈을 뿌리고, 독점 세력에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는 -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치인들이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충고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경제정책에서 정치를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바로 독립적 중앙은행, 독립적 규제당국, 엄격한 재정지출 규칙 등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감독에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법을 통해 재정지출의 규율을 강화하는 등 IMF의 교리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한편에서 한국의 보수는 시장을 옹호하고, 다른 한편에서 진보는 정부를 비판하며 모두 IMF 교리의 충실한 전파자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임에도 ‘개혁’, ‘선진화’ 등



으로 포장되어 일사천리로 IMF체제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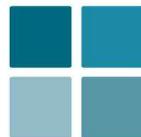
다행히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민적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융합’ 과 ‘창조경제’ 라는 신조어를 통해 금융, 산업, 그리고 미디어 분야 등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올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진정 없애고자 하는 정치는 바로 민주주의 자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경제정책은 정치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실제 민주주의의 거세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 긴축을 둘러싼 충돌은 예산, 실업, 성장률에 관한 수치에 관한 것뿐이 아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에 관한 충돌이다. ...영국의 총리를 포함하여 유럽의 리더들이 정치적, 사회적 지지의 한도를 넘어서 긴축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최상위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복무할 때 과연 민주주의의 요지는 무엇인가? 바로 유럽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3/may/08/osborne-marx-imf-austerity-democracy>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is_this_what_we_fought_for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심각한 자산불평등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Psychological Science

2013.07.11 |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스웨덴의 부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며 소득 상위 20%가 전체 부의 5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상위 20%는 전체 부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부의 불평등 정도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보다 더 균등한 분포 상태를 선호하고 있다.



▶ 역자의 글 ◀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 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¹⁾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 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 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과도한 금융시장의 확대,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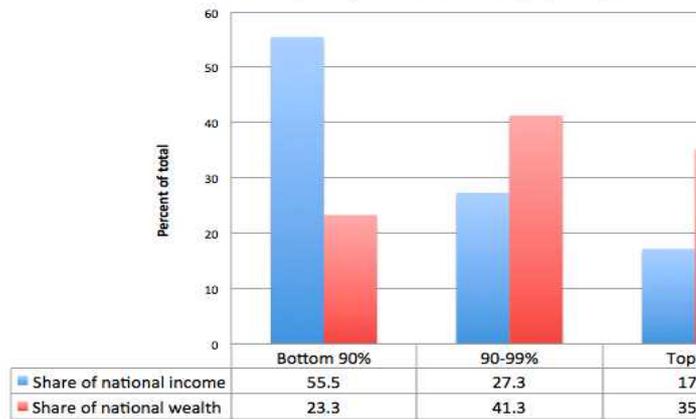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하여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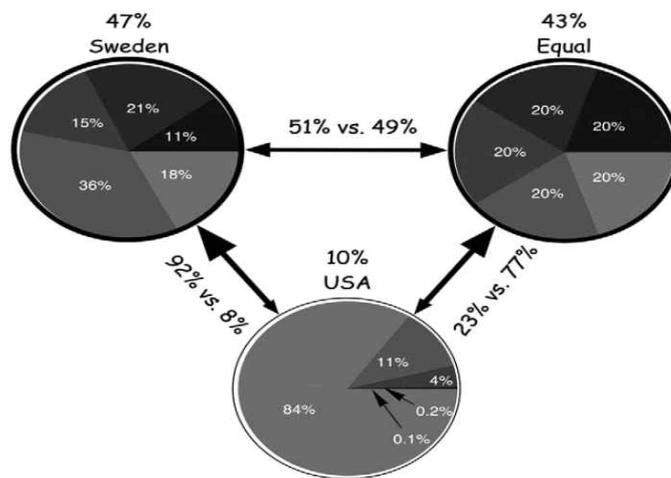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그림1]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 자료: EPI

[그림2] 미국인들은 어떤 사회를 선호하는가?



Ariely & Nor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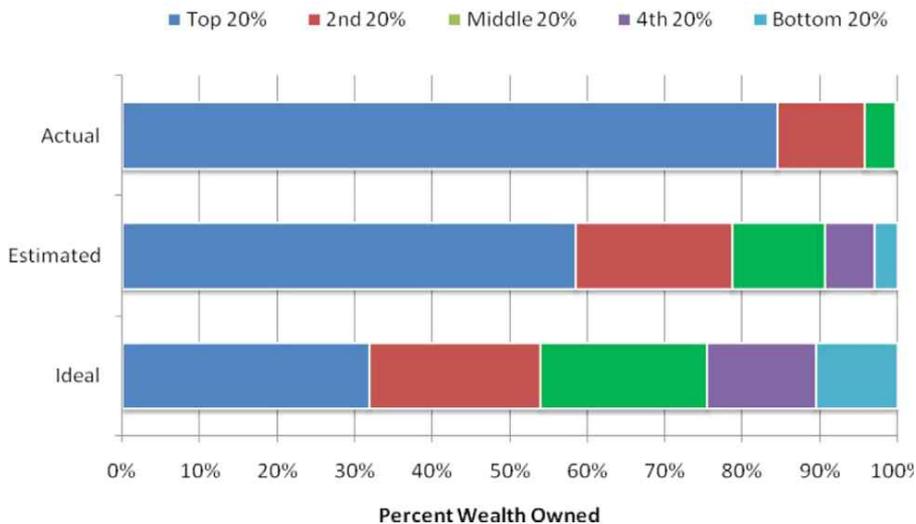
흥미롭게도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스웨덴의 부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들은 철학자 롤즈의 ‘무지의 베일’ 원리를 적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재산의 분



포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된 두 쌍의 재산의 분포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아래 중앙에 있는 파이 차트가 미국의 재산 분포이고, 좌측 상단의 차트가 스웨덴의 소득 분포이다. 실제 스웨덴의 재산 분포는 미국보다는 균등하지만 소득 분포보다는 불균등하다. 미국인의 92%는 스웨덴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였고, 이는 성별(여성:92.7%, 남성:90.6%), 정당(부시 투표자: 90.2%, 케리 지지자: 93.5%), 소득 수준(5만 달러 미만: 92.1%, 5만~10만: 91.7%, 10만 이상: 89.1%)과 거의 무관하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미국인들의 재산 분포에 관한 이상, 인식, 그리고 현실 간의 엄청난 갭에 관한 조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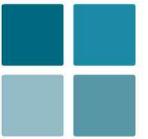
[그림3] 부의 불평등 인식, 이상, 그리고 현실 간의 괴리



미국인들은 상위20%가 전체 부의 5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상위20%는 전체 부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이지 않지만, 최하위 20%는 전체 부의 0.1%, 그리고 하위 20~40%는 전체 부의 0.2%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하위 40%가 전체 부의 0.3%만을 차지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부의 분포로는 상위20%가 1/3 수준인 3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부의 불평등 정도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추정보다 더 균등한 분포 상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결과는 성별, 정당, 그리고 소득 수준과 거의 무관하였다. 더욱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왜 미국인들은 더 균등한 사회를 압도적으로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들이 내린 잠정적인 대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제 부의 불평등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 간극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부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계층 간 이동성의 기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기회’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심각한 불평등이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의 분포에 관한 이상과 현실 간 간극을 인식하더라도 그 간극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ILO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Global wage report 2012/13, ILO

2013.02.01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 역자의 글 ◀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 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그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노동몫 배분 정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임금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Global wage report 20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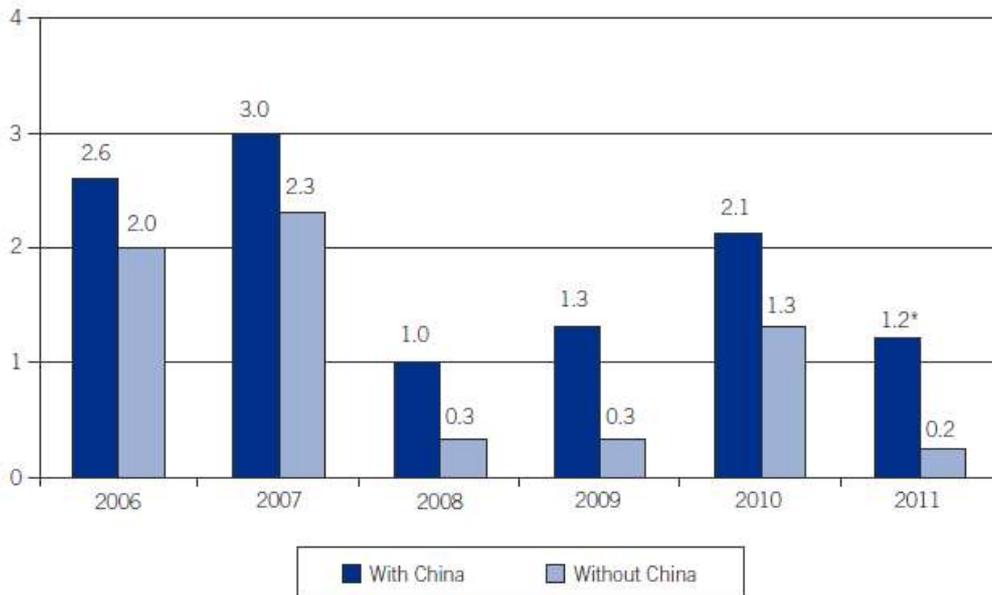
Global wage report 2012/13
: Wages and equitable growth
ILO

주요 임금 추이

- 위기 이후 임금성장률에 있어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실질임금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낮은 임금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임금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1.2%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1%, 2007년 3%보다 낮은 수치임
- 여기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2% 밖에 되지 않음. 2011년의 임금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연평균 실질임금성장률, 2006-2011 (단위 : %)



※ 출처 : ILO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임금성장률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실질임금성장률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겪으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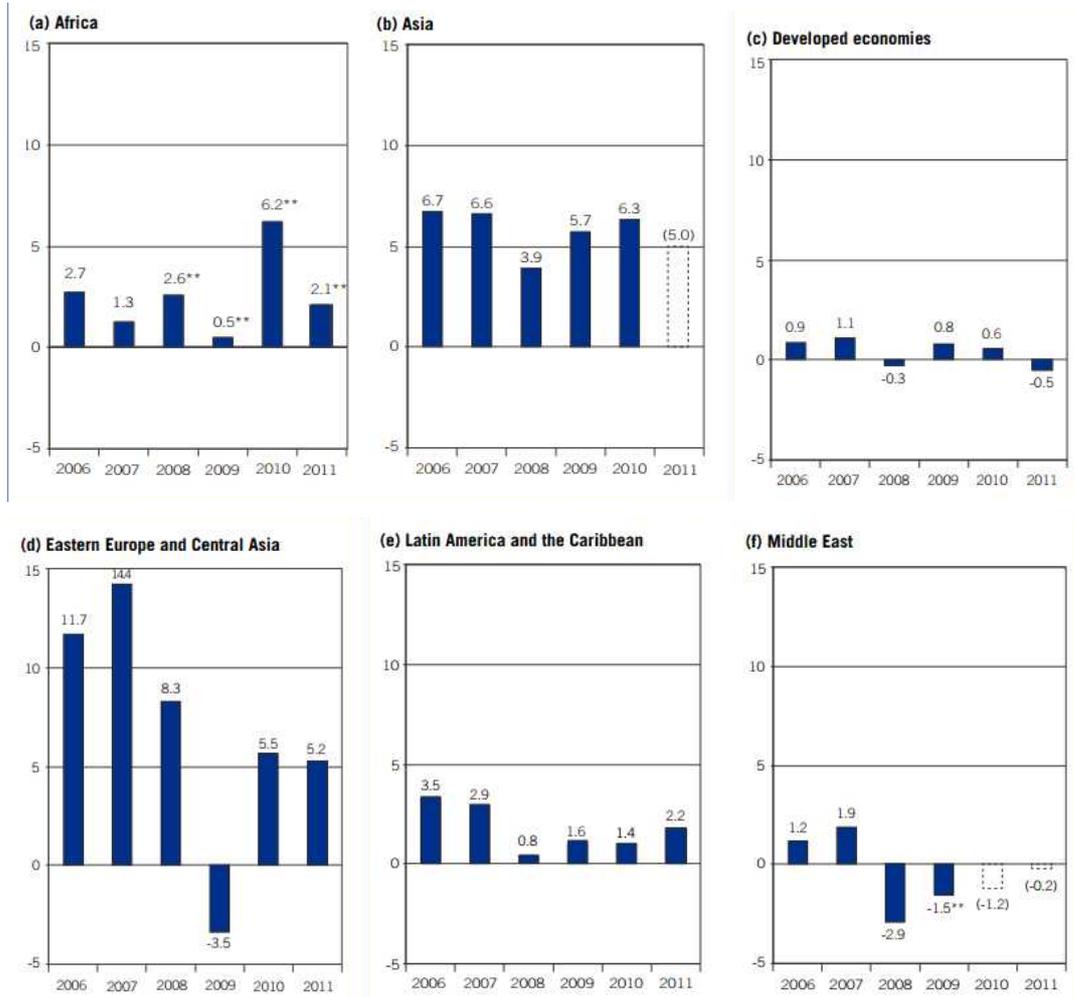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성장률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큼.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9%임

- 임금변동폭이 가장 큰 것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전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중동에서는 2008년 이후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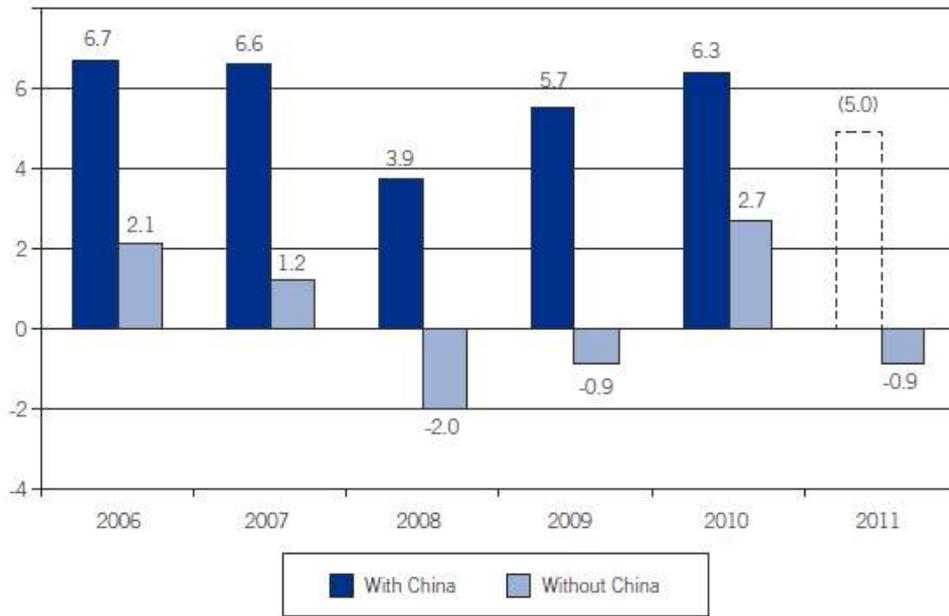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연평균 실질임금성장률, 2006-2011 (단위 : %)



※ 출처 : ILO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그림 3] 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실질임금 성장률, 2006-2011 (단위 : %)



※ 출처 : ILO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2000년에서 2011년까지로 관측 연도를 확대할 경우 임금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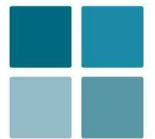
- 선진국들이 이 기간 5%의 임금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두 배로 임금이 증가함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함.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임금의 실질가치가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짐

□ 임금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큼

-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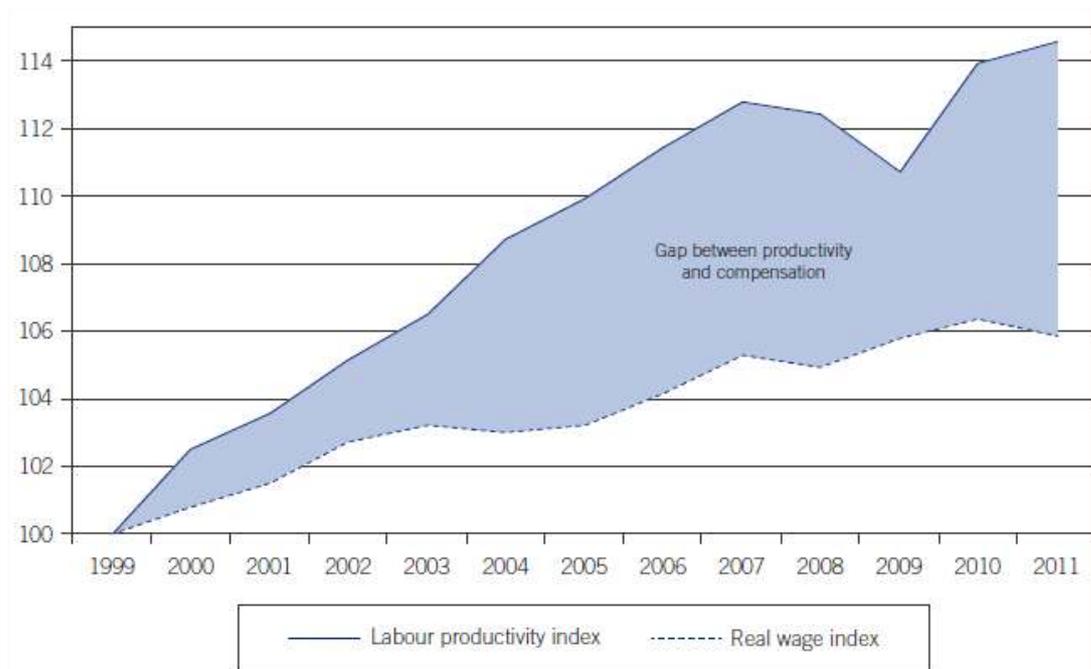
-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1.4달러, 브라질 5.4달러, 그리스 13달러, 미국 23.3달러, 덴마크 34.8달러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노동몫의 감소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몫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평균임금의 두 배 만큼 증가함
- 미국에서는 비농가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980년 이후 85%가 증가했지만, 실질보수는 약 35%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거의 25%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임
-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자본의 몫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임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지난 10년 사이 임금이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GDP는 임금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에 따라 노동의 몫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선진국의 평균임금과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 (1999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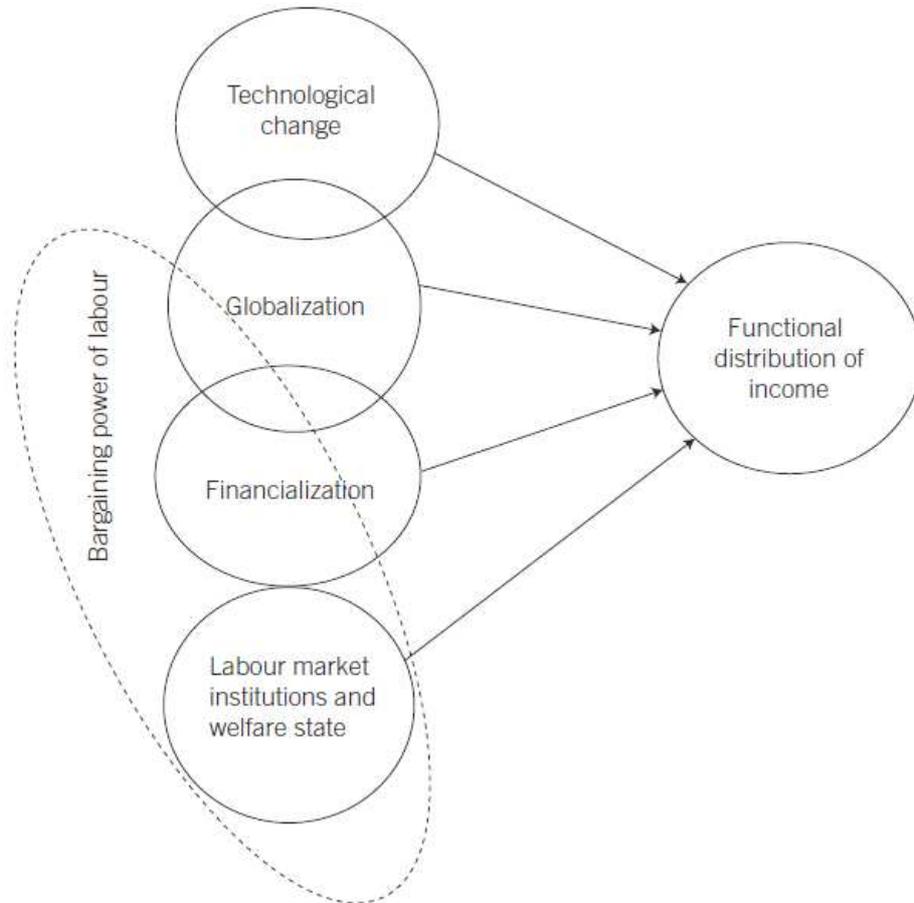


※ 출처 : ILO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노동몫의 감소의 이유로는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차원의 무역, 금융시장의 팽창, 노동조합의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의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5] 노동력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출처 : ILO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노동력 감소의 영향

- 노동력 감소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며 가구의 소비를 줄이고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유효수요 부족을 순수출의 증대로 매워왔음. 하지만 모든 국가가 순수출을 증대시킬 수는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감소 전략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보다 국내 소비감소가 더 커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순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임금감소전략을 실시할 경우, 노동력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유효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임



공정한 성장을 위해

- 노동몫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
 - 세계임금리포트는 국가별 소득분포와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여러 국가들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개별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찾을 수 있음. 상위 10%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했음
 - 이러한 내적 불균형은 저임금으로 인한 부족한 유효수요를 부채나 순수출로 매워야 하는 외적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생산성 증대가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내적, 외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혹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재균형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외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의 경우, 생산성 증가 수준과 임금 증가 수준을 잘 연계할 경우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재정이 적자일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몫 감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건너뛴 외부로부터 강요된 긴축정책은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임금결정 관련 제도의 강화
 - 임금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속화된 노동시장 분단, 급속한 기술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간 제대로 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결정에 있어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제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증명되었음
 - 최저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노동시장 밖의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함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음
 -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변화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임금소득자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임금소득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대로 된 사회보호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예방차원의 저축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국내소비수요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research/global-reports/global-wage-report/2012/language--en/index.htm>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FDI and offshore finance, UNCTAD

2013.07.04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지금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자금투자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다. 2011년보다 약 100억 달러(-14%)가 줄기는 했지만, 2012년 역외금융센터로 투자된 자금은 거의 80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역외금융센터로 자금이 몰려든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다.



▶ 역자의 글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 둔 부자들의 명단을 연속적으로 공개하고 일부 유력인사들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회에서도 진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한국 부유층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탈법 탈세행위의 심각성을 지목하기도 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특히 핵심은 조세 피난처를 넘어 전 세계에 계열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시스템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바로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한 ‘이전가격 시스템(transfer price system)’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회사가 프랑스에 법인을 세우고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하자. 프랑스 법인이 직접 소매 판매하는 대신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에 원가보다 조금 높게 넘기고, 아일랜드 법인에서 이익을 크게 붙여 판매했다면 프랑스 법인은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세금도 거의 안 낼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세금이 낮은 이웃 룩셈부르크에 금융법인 계열사를 설립한 뒤 프랑스 법인이 여기서 금융대출을 받게 하고 그나마 이익도 이자비용으로 룩셈부르크 금융법인에 돌려줬다면, 프랑스 법인은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이익은 없고 비용만 잔뜩 늘어났으므로.” (김병권, “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수법은 따로 있다.”)

그런데 때 마침 지난 6월 27일자로 유엔무역개발회(UNCTAD)에서 2013년 세계투자 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2013")를 발표하면서, 보고서의 일부에서 조세 피난처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규모에 대해 적시를 해놓았다. 이 보고서의 안에 “직접투자과 역외 금융(FDI and offshore finance)”이라는 약 4쪽 분량의 짧은 내용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이동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또한 전형적인 조세 회피처는 전체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볼 때 크지 않은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같은 낮은 조세국가들에서 주로 활동하는 특수목적회사들의 자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주의환기 시켜준 점은 흥미롭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지역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를 커지게 만들고 광범위한 조세회피행위를 하는 핵심 주체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며, 이들이 이전 가격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조세 회피를 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정당하게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에서는 더 이상 상세히 다루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처를 경유하는 최근의 글로벌 자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고 몇 가지 정책적 제안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 소개한다.

세계 직접투자 자금 흐름과 역외 금융(조세 회피처) (FDI and offshore finance)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13년 6월 27일자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58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조세회피(tax avoidance)를 줄이고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예를 들어 조세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거래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것이 G20정상회의가 출범부터 고려한 핵심과제였다. 조세 회피처(tax haven)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미있는 압력이 가해졌고 각국 정부들은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조세회피구조에 제약을 두려는 활동가 그룹들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해왔다.



1. 직접투자와 역외금융(Offshore finance)에 대한 거시적 경향

[그림 1] 조세 회피처로 유입된 세계 직접투자 자금규모(왼쪽:10억 달러)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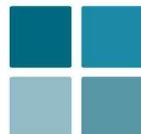


Source: UNCTAD FDI-TNC-GVC Information System, FDI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

직접투자에서의 역외금융 메카니즘은 주로 1)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 OFC) 또는 조세 회피처(tax haven), 2) 특수목적 회사(Special Purpose Entities; SPE). - 환율 리스크 관리나 투자금융 등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 계열사들이나 지주회사같은 특수 회사들로 구성된다. 이들 회사는 세금이 낮거나 세금관련 특별한 혜택을 주는 나라들에 세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자체로는 아무런 경제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수의 직원들만 있으며 비 금융자산도 거의 없다.(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이다. -인용자) 역외금융센터나 특수목적회사는 제 3국으로부터, 또는 제 3국으로 자금을 옮기는 통로역할을 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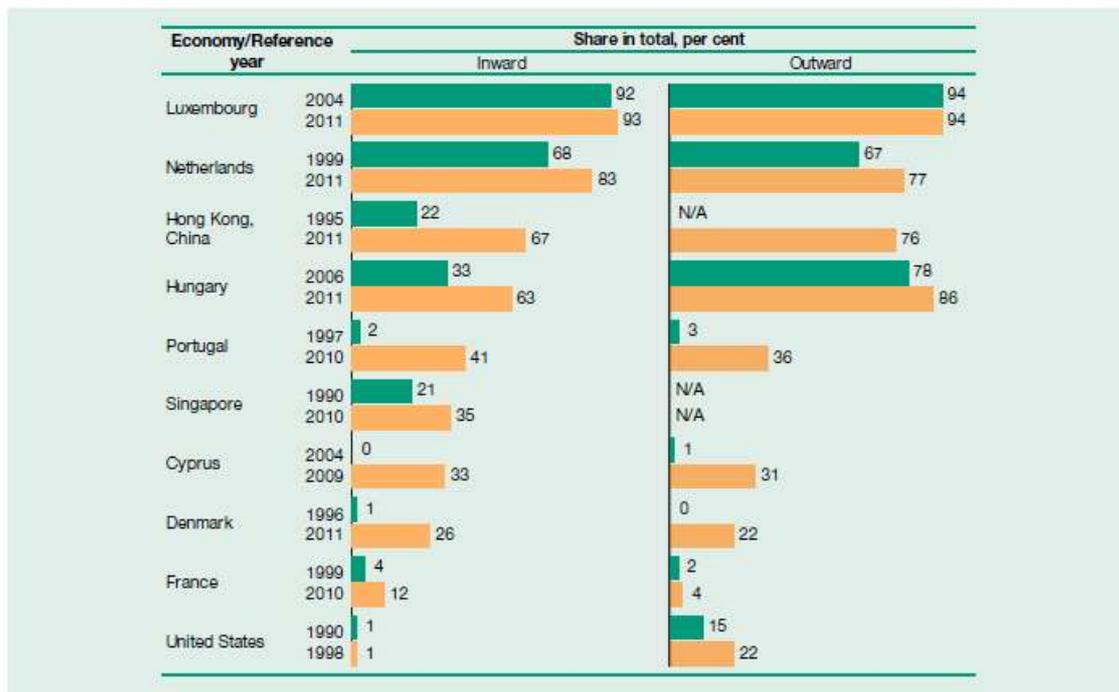
지금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자금투자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해있다. 2011년보다 약 100억 달러(-14%)가 줄기는 했지만, 2012년 역외금융센터로 투자된 자금은 거의 80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역외금융센터로 자금이 몰려든 것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다.([그림 1] 참조) 2007~2012년 기간에 역외금융지대로 유입된 자금은 연 평균 75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기간 연평균 유입액 15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조세 회피처의 경제는 이제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며 전 세계 직접투자의 6%에 달하고 있다.

조세회피처로 들어온 자금은 곧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유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원래 국가로 되돌아가는(round-tripping) 자금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투



자하는 키프러스, 네덜란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3개국은, 러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3개국이기도 하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위장된 국내 투자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역외 금융센터로 흘러들어온 자금의 상당부분은 다른 나라로 재투자하기 전에 잠깐 머물러 있는 투자자금이다.

[그림 2] 해당 국가들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의 직접투자 보유규모



Source: UNCTAD FDI-TNC-GVC Information System, FDI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
Note: Data for Hong Kong (China) in 2011 refer to investment holdings, real estate and various business activities.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헝가리 소재의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금융 흐름은 유엔 직접투자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특수목적회사는 다수의 주요 투자 국가들에서 투자 흐름과 양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도 증대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특수목적회사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나라다. 과거 10여 년 이상 이들 회사를 유치한 대부분 국가 경제에서 이들 회사들은 직접투자과 관련하여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수목적회사가 역사적으로 주변적 역할 정도밖에 못했던 포르투갈과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직접투자가 자본을 유치한 국가 경제의 활동에 영향을 준 정도를 측정할 데이터는 없지만 대부분은 제 3국으로 다시 재투자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 들어온 직접투자의 1/3은 특수목적회사가 유입시킨 것인데, 유입된 자금 대부분은 중·동부 유럽으로 재투자된다.

특수목적회사를 유치한 나라들에게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세혜택 때문이고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되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모리셔스(아프리카 동쪽의 섬나라)는 인도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비 거주 인도인들이 소유한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이들은 모리셔스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인도에 투자하는 것이다. 특수목적회사 투자자금의 전달자로서, 모리셔스는 인도에 대한 최대의 직접투자 국가가 되었다.

세금회피가 역외금융센터와 특수목적회사의 주요 동기지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다.

- ▶ 조세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온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세 중립적인 해법(tax-neutral solution)으로서 조세 회피처를 이용할 수 있다.
- ▶ 서로 다른 법적 관할권에 분산되어 있는 주주들이 법적 중립성(legal neutrality)을 위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할 수 있다.
- ▶ 제도가 취약한 국가의 기업들이 국제적 비즈니스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국제 자본시장과 법적 시스템에 접근하기 쉽게 해 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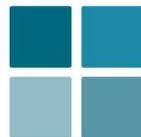
2. 조세회피를 줄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

OECD가 주도해왔던 국제 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견고한 노력들은 주로 역외금융센터에 초점이 가 있지만, 역외금융센터로 들어오는 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 역외금융센터로 들어오는 핵심적인 자금은 자금을 잠시 보관(parked)해두려는 다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TNC)의 해외 현금 보유 차원에서 봐야 한다. 실제로 역외 금융센터로 유입된 자금은 다국적 기업의 수입이 해외에 머무른 규모와 유사한데, 2005년 미국의 자국투자법(Homeland Investment Act)의 효과가 한편에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자금이 해외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 자금이 역외금융센터로 유입되게 되었다. 2008년 이후 역외금융센터의 자금유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남겨둔 현금보유의 기록적인 급증과 함께 동시에 발생했고 때문에 효과가 상쇄된 것이다.

▶ OECD일부 국가들이 역외금융센터로의 자금 유출을 줄이려 했던 효과는, 전체 글로벌 투자자금에서 새로운 투자 국가들의 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상쇄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역외금융센터로 유입되는 자금은 2009년에 39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2/3 수준까지 줄었다. 같은 해에 일본에서 유입된 자금은 23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신흥 투자 국가들의 자금 유입증가로 상쇄되었다.

그러나 역외금융센터는 문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제적인 노력이 역외



금융센터의 조세회피 방지에 맞춰져 있지만, 실은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자금흐름이 훨씬 중요하다. 2011년에 역외금융센터로 9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단 세 나라에서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60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는데 약간의 변동이 생겨도 역외금융센터의 자금유입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다. 또한 여기서는 직접투자만 거론했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조세 국가들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이전가격 구조(transfer pricing schemes)도 중요하다.

3. 정책적 고려방향

가능한 정책적 대응은 복잡하겠지만 몇 가지 짚어본다면,

- ▶ 역외금융센터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심 문제도 아니다.
- ▶ 신흥 투자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역할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꼭 조세회피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용이한 회사설립, 무역정책의 이익, 국제투자 협정 등 자국에서 얻지 못하는 다른 잠재적 이익을 위해서 역외금융센터로 자금을 투자할 수도 있다.
- ▶ 국제 금융거래에서의 조세회피 억제와 투명성 확보는 글로벌 이슈이므로 더 집중적인 다자간 접근이 필요하다.
- ▶ 궁극적으로, 역외금융센터와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 역외조세 체제의 활용, 다국적 기업 수익의 본국 송금에 연계된 조세의무 체제 등을 서로 결합시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접근하지 않으면, 역외금융센터와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를 줄이려는 노력은 부질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역외금융센터와 특수목적회사를 뛰어넘어 이전가격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하는데, 다국적 기업이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한 지역에 공정하게 세금을 내도록하는 과감한 해법도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통합 접근법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각 지역 자회사가 발생시킨 매출과 자산, 고용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과세부담 비중을 정식화 시킬 수도 있다.)
- ▶ 정책결정자들은 역외금융센터나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양성적으로 허용 가능한 제한 범위에 관해 유용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향후에 유해한 조세회피행위나 투명성 부족에 대항해 싸울 수단을 제공해준다.



▶ 마지막으로, 역외금융센터와 특수목적회사로의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한 것이다. 특수목적 회사들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 기존 전통적인 직접투자와 분리하여 따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필요도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588>



고용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ILO

2013.01.23|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일자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긴축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적 보호 기반 강화, 최저임금제의 도입 및 최저임금의 상승, 청년층 등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역자의 글 ◀

세계 경제는 아직도 2008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확실성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에게 있어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심각한 실업률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은 균형 잡힌 재정 집행과 재정 건실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미국 프린스턴대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올리 렌(Olli Rehn)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²⁾.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 역시 EU의 긴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IMFC에서의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보호 기반의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http://krugman.blogs.nytimes.com/2013/02/22/paul-de-grauwe-and-the-rehn-of-terror/>참조



라이더, 일자리 회복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하다
(Ryder warns that prospects for jobs recovery are receding)

2013년 4월 23일
국제노동기구(ILO)

워싱턴의 IMFC 연설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지금의 국제적 정책 대응 노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감소에 대한 전세계적 우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인 가이 라이더(Guy Ryder)는 세계 경제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지금의 정책은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신흥 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IMFC의 연설에서 “지금의 정책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노동력의 증가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는 신흥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가의 빠른 성장은 지연시키고 있다” 고 말했다.

라이더는 유럽, 미국, 일본의 고용전망은 암울하고 남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청년 실업률은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실질임금은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득불평등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으며 그 중 7천 4백만 명이 청년층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의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015년에서 2030년 사이 4억 7천만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8억 7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인구라고 추정하고 있다.

라이더는 “일관된 국제적 전략 속에서 상이한 국가별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조합해 만드는데 내재하는 어려움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와 삶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국제적 정책협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더는 많은 국가들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일자리 중심의 회복 전략의 경우 세수의 증가와 경기후퇴 관련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공공재정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집약적인 선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 완화, 사회적 보호 기반 강화, 최저임금제의 도입 및 최저임금 상승, 청년층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포함하는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라이더는 사회적 보호와 최저임금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 라틴아메리카와 국내수요(내수)가 경제 성장을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정책 성공의 예를 지적했다.

그는 새천년개발목표의 데드라인인 2015년이 다가오면서 이런 종류의 정책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시작된 2015년 이후 발전 계획에 대한 전세계적인 활발한 논쟁은 국가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 지원 구조를 통해 무엇이 수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고 하면서, “그것은 또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 덧붙였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1157/lang--en/index.htm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AEGEE EUROPE

2013.03.26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EU 집행국은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60억 유로(한화 8조 7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 상태에 있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실직으로 인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 견습 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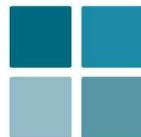


▶ 역자의 글 ◀

현재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청년층의 고용은 급속히 위축되었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연령대 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유독 청년층의 고용 회복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9.6%(2011년 ILO 추정 자료)로 50%에 육박하는 그리스나 스페인, 그리고 20%를 넘는 EU 회원국들에 비해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상태로 있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청년고용문제 역시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취업자 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와 같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EU는 지난 2월 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청년고용계획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직업훈련, 견습 제도 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이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청년고용계획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Commission proposes rules to mak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a reality)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ászló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 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



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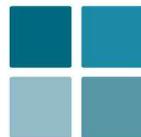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Robert Reich

2013.05.24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역자의 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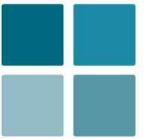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겨둔 부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이 뜨겁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마저 뻑뻑하여 긴축이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도 뒤늦게 사회 안전망을 늘리기 위한 복지지출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부자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안내면서 재산을 조세 피난처에 은닉해두고 있으니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완화가 확대된 이래 더 심화되었다. 특히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한 세계적 IT기업 구글,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등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이미 2011년 세전 수익의 80%에 해당하는 98억 달러를 법인세가 전혀 없는 버뮤다로 옮겨 세율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것이 밝혀져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영국에서 32억 파운드(2011년)의 돈을 벌었으나 법인세는 600만 파운드만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아이폰 제조사 애플 역시 2012년 아일랜드 자회사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지난해 90억 달러 정도 덜 냈다고 알려져 미국 의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12년 현재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이 해외 취득 소득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아 1조 7천억 달러의 현금이 해외에서 보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관되게 미국 공화당의 긴축 주장에 반대하면서 부자 증세를 적극 주장해온 미국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와 법인세 감세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 소개한다. 라이시는 그들의 조세 회피와 감세가 결국 평범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매워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대 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이 서로 협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반대로 극우 국수주의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과 국민국가(Global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2013년 5월 20일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로버트 라이시 블로그(<http://robertreich.org/>)

글로벌 자본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막강해짐에 따라, 거대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 을 올려야 한다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내고 세금을 깎아서 몸집을 유지하려고 정부와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조세 피난처에 이윤을 숨겨 두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과 시민들은 이제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인 조세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 그리고 모든 월가의 거대은행들은 가능한 많은 이익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쟁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낮은 법인세가 필요하다고 워싱턴을 압박한다.

물론 헛소리다.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의 국가의 국가 경쟁력 운운하면서 자국에 대한 애국적인 표현을 쓰지만 - 역자)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충성심도 갖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가능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며 세금을 낮추고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국가 사이의 경쟁을 조장하는데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평범한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공장을 이전하는 등 각 국가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경쟁을 조장한 탓에 그 평범한 국민들은 이미 월급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며칠 런던에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영국정부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담합을 하는지에 관한 얘기뿐이다. 구글은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 자회사를 이용해서 영국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위해 영국매출을 조작했다.(이 문제를 조사한 영국 의회 위원회 의장은 ‘사악하지 말라’ 는 사훈을 가진 구글에게 ‘기만적이고, 계산적이며, 비윤리적’ 이라고 비난했다.) 아마존은 세금이 낮은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로 영국 매출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냈다. 때문에 영국에 내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영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었다. 스타벅스의 세금회피 전략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영국 소비자들은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스타벅스 보이콧을 시작했다.

* 골드만삭스 영국 법인이 2013년 연초로 예정됐던 2010~2012년분의 보너스 지급 시기를 오는 4월 초로 연기하는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다. 4월 6일부터 시작하는 2013회계연도부터



영국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5%로 기존보다 5%포인트 낮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처럼 지급을 연기하면 골드만삭스 임직원들은 수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지급 시기를 조정, 세율에서 이득을 취하는 데 골몰한다는 것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

* 아마존은 2012년 영국에서 43억 파운드 매출을 올렸는데 법인세는 매출의 0.1%만 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아마존은 지난해 영국에서 법인세로 240만 파운드를 냈지만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이보다 많은 250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2013.5.22)

* 스타벅스는 영국에 진출한 1998년부터 총 30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860만 파운드만 낸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흥역을 치렀다. 스타벅스는 결국 2013~2014년 1천만 파운드의 세금을 더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3.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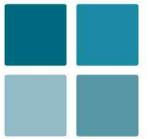
그러는 사이, 각 국가들이 함께 뭉쳐서 글로벌 자본에 대항하여 협상력을 높이기를 기대할 시점에서, 정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인 혐오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이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 영국에서 세 번째로 대중적인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 유권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음 총선에서 독립당에 투표할 생각을 하고 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의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독립당 지지율은 4% 포인트가 상승하여 19%가 되었던 것이다.

우익 국수주의 정당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민 반대나 보호주의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낮은 세금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는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분열 양상은 글로벌 자본의 힘만 강화시켜줄 뿐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social-europe.eu/2013/05/global-capital-and-the-nation-state/>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2013.07.19
www.saesayon.org

우리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진보적 정책 자산을 늘려나가는
새사연의 [잇;북]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